학사관리 자율화의 과제와 전망

곽 진 호

포항공대 수학과 교수, 교무처장

1. 머리말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학사행정 자율화 방안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교육도 그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난날의 우리 대학들은 사회의 높은 교육욕구열을 이용하여 오직 양적 팽창에 주력하였으며 대학 재학기간 동안의 학생교육 수준이나 교수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에 게을리 하여 왔다. 특히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있었던 대학생들의 사회 현실 참여 운동으로 대학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크게 미흡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연구능력은 이를 총합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의 선진형 한 개 대학의 연구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들의 연구재정능력의 총합도 한 개의 기업연구소나 선진 대학의 연구재정능력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지도자급 지식인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최종 학위 교육을 받아야 했으며, 국내에서 교육시킨 기업체의 인재 역시 해외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했다. 한마디로 대학은 교육과 연구 등 제반 기능에서 제몫을 다하기에는 너무 부실하였다.

이제 대학은 본래의 교육, 연구기능을 회복하여 국제적인 대학 수준으로 발전하고 21세기의 대학으로 생존하기 위한 대학간 자율 경쟁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때 대학의 학사행정 자율화는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기본 요건이며, 이제 대학은 스스로 상실한 자생력과 자주능력을 회복하고 경쟁능

력을 강구하여야 할 때이다. 대학은 그들의 건학이념이나 교육철학에 따라 교육 중심대학, 연구 중심대학, 산업체 실무 인력양성 중심대학, 예체능계 중심대학, 의학계열 중심대학 등으로 그들의 목표를 특성화하여 국제적 성장을 시도하고, 이러한 발전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제반 여건 위에서 대학의 나아갈 길을 살펴보며, 이에 따른 학사 자율화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학사관리 자율화의 정착을 위한 문제점 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학생선발과 정원의 자율화

크게는 대학이, 작게는 학과나 학부가 신설과 폐지의 생사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대학의 정원제가 완전 자율화되면 각 대학은 학과의 정원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학과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대학들은 선진사회의 평가기능에 의하여 그들의 사회발전 기여도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이미 2000년도를 전후로 한 대학 지원생의 감소를 예상하여 기존대학 자체가 축소 내지 존폐의 위기감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대학들이 서로의 생존을 위한 경쟁시대를 준비할 뿐 아니라 교육시장개방에 따른 국제적인 질적 무한 경쟁의 도전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은 이제 스스로의 평가에 의해서 경쟁에 도전할 수 있는 학과나 교육과 연구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평가에서 뒤지는 분야는 스스로 폐쇄하거나 축소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한 대학이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존학과나 교육과정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여 모든 기존학과에 평등한 기회와 평등한 지원을 약속해 나간다면 그 대학 전체가 대학간 경쟁에서 낙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순수 기초분야와 같이 집중적 투자가 요망되고 국가 인력양성 및 기술 전략상 필요한 분야는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은 다양화하여야 한다. 대학마다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방안에 고심하고 있으며 다양한 선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수능시험, 내신성적, 본고사의 적절한 혼합입시제, 추천입학제 등 다양한 입시제도의 도입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소위 '명문고등학교 = 우수한 대학입시학원'의 등식관계를 개선시켜야 한다. 입시고사의 다양성뿐 아니라 입시시기의 다양화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연간 2회 이상의 수능시험 실시가 바람직하며 대학 입시도 여름, 겨울 등 대학의 각 학기 시작 때마다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대학마다 입시제도가 다양화되고 명문대학 입시준비를 위한 획일적인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대학 입시의 경쟁 속에서도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다.

신입생 모집정원의 자율화도 필요하다. 각 대학의 본고사 제도가 부활됨에 따라 대학의 학생선발 방안이 특차전형과 일반전형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복수지원으로 응시 기회가 늘어나고 고득점자의 재수율은 크게 낮아졌다. 입시제도는 계속 연구되어야 하며 수험생들에게는 복수지원의 기회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중 합격자들의 증가에 따라 각 대학별로 합격대상자의 등록 포기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입시행정의 복잡성은 대학에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학의 학생 정원제도를 자율화하여 각 대학이 각 학년도의 신입생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대학 입시 정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때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각 대학의 입시정원을 학년도 단위가 아닌 3년 내지 5년 단위의 입시정원제를 도입하더라도 연도별 정원의 획일성은 지양되어야 하겠다.

학생유치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현행 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대학 입학은 거의 불가능하다. 고등학교에서의 교과과정 내용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내 대학의 입학시험에 불리할 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국내 대학 입학정원은 모집정원의 2% 내에서 정원외로 선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 학생들의 국내 유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이며,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국적의 교포 자녀들까지도 국내 대학 입학은 힘들게 되어 있다. 이들 교포 자녀뿐 아니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교포 자녀들에게도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통일 조국의 교육문제를 준비해 나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특히 대학원 과정에서는 외국 학생들의 국내 유학의 길을 열어 주고 적극 유치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화의 길이며, 한국이 명실상부한 국제 속의 지도국으로 교육 수출국이 되는 것이다.

3. 학사와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연구에서 산·학·연 제도가 강조되듯이 교육에서도 학제간 혹은 학부간 교육과정과 학위 수여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정보화 시대를 앞두고 이제 컴퓨터의 사용은 사회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의 사용을 모르는 자는 한때의 문맹자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되었다.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과학기술 전문인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반인에게 상식화되어 감을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분야를 전공한 행정가, 언론인, 기업경영가 등이 사회 각계각층에 요구되고 있다. 항공산업과 같은 첨단과학 기술분야의 개발을 위해서는 어느 특수한 한 분야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각 분야를 골고루 이해하는 전문인을 중심으로 범학과적인 기술협동이 필요하다. 이는 대학의 연구와 교육도 학과 중심의 학사운영을 병행하여 범학과적인 학사운영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유사계열의 학과 통폐합뿐 아니라 범학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나아가 범학과적인 학위수여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대학의 양대 기능인 교육과 연구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대학의 중심 행정이었던 교무처 외에 근래에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처의 조직이 각 대학에서 생기고 있다. 대학의 주체인 교수도 교육 중심과 연구 중심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동안 대학 운영의 획일화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교수들은 개인적인 차별이 없이 같은 분량의 교육업무와 연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본인의 연구와 대학원생의 지도능력에 관계없이 한 학과의 모든 교수들이 같은 수의 대학원생을 분담 지도하기도 하였다. 이제 대학의 교수들도 각자가 할 수 있는 업무의 특성을 찾아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교수에게는 연구를 통하여,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수에게는 교육을 통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각 대학 교수들의 주당 강의부담 시간수를 대학별로 혹은 학과별로 자율화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박사학위를 배출하고 있는 연구 중심 학과에서는 교수들이 주당 책임강의 시간수를 줄이고 연구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대학의 연구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교육은 창의력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고등학교까지의 학교교육이 오직 대학입시의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실시되고, 이는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지식의 보급과 암기식 교육을 유도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의 입시제도를 다시 연구하고 본고사를 부활하였으며 주관식 입시고사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교과과정에서도 고등학교까지의 이러한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좀 더 창의력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연구가 있어야 하며, 지식전달 위주의 교수주도식 강의를 탈피하여 학생참여식의 강의 운영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교육에는 학생이 고객이다. 강좌개설과 강의시간표 작성에서 학생들에게 강좌선택의 기회를 늘리고 교육적 욕구가 최대한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강의 시간대를 가능하면 골고루 퍼지게 하고 동일한 과목의 강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주중 같은 시간대로 편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강좌 선택의 폭을 늘려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전임교수의 부족으로 높은 시간강사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시간강사들의 집중 강의 선호에 따라 전임교수의 강의시간도 주중 동일 시간대를 가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대학은 전임교수 확보율을 높여 내실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은 개방되어야 한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정확히 사회에 알려져야 한다.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것을 어느 대학에서 배울 수 있으며, 기술자문이나 산·학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기업이 필요한 내용에 따라 적절한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은 정확한 정보를 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대학이 특성화되고 다양화될수록 더욱 그러하다. 대학의 학사행정도 개방되어야 하며, 특히 인사행정에서 그러하다. 국내의 각 대학 교수들은 거의 자기 출신 대학에서 근무하기를 선호하며, 교수 채용의 결과도 자기 대학 출신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A라는 대학의 교수 채용시에는 A 대학 출신이 최고 평점을 받고, B라는 대학의 교수 채용시에는 B 대학 출신이 최고 평점을 받는다. 심지어는 A 대학 출신은 B 대학의 교수직이 주어져도 그들의 배타성 속에서 견디어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저자의 전공으로 미국의 최고 10대 명문대에서 자기 대학 출신교수가 30%를 넘는 대학은 2개교이며, 반 이상이 10% 미만의 자기 대학 출신자를 채용하고 있다. 대학 운영의 폐쇄성은 학과별 필수과목 책정의 과다 등 학내 학사운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적인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새로운 대학에서는 반드시 정립되어야 할 과제이다.

4. 대학원 운영의 자율화

석·박사과정의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 대학원의 현행제도는 학사학위를 마친 자라야 대

학원 진학이 가능하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뚜렷이 분리되어 있다. 초·중등과정에서 우수 학생의 조기교육을 위해 월반제 도입을 고려하듯이 우수한 학생의 대학원과정 조기 진학제도와 석·박사과정의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 구미지역의 대학들이 학사 학위자에게 박사과정의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박사학위 과정중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취득한 학점을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학위자의 학위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졸업논문의 질적 수준과 학문적 자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정확한 질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고 그 대신 대학원 과정의 학사행정을 자율화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원 과정의 교육은 대학의 특성화된 연구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대학원 학생들이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분야의 전공 교수가 소속 대학에 없다고 불평하는 사례는 외국의 큰 대학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어떠한 대학도 학문의 모든 분야를 연구 교육할 수 있도록 교수진을 갖추고 있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대학이 그들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분야를 설정하여 대학을 특성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대학원 교과과정을 설정할 때에 타대학이 혹은 선진국의 명문대학이 어떻게 하는가를 참고하여 모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소속 대학의 교수진을 참고로 하여 어떤 연구 분야와 교육 분야를 중점화하여 특성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로부터 스스로의 교과과정과 교육방법론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교육과 연구분야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학부과정이 없이도 대학원 과정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거론되고 있는 의학계나 법학계의 대학원 과정화는 모든 전공의 학사학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 과정의 개설을 뜻한다. 현재의 학사제도에서는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다양한 특수대학원은 학부과정의 동일 전공 분야가 없이도 개설될 수 있지만, 정규 석·박사학위를 배출하는 대학원의 전공과정은 학부에서 동일한 전공학과의 학사학위를 배출할 때만 개설이 가능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학사과정의 각 학과 교과내용은 소속 학과 교수진의 연구영역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므로 대학별로 뚜렷한 차이점을 갖기가 힘들다. 하지만 대학원 과정의 교과내용은 동일 학과라 하더라도 각 대학의 연구 방향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며 또한 특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대학원 학생을 선발할 때에 선발 요건이 다양화될 수 있음을 뜻하며, 특히 연구중심대학교의 대학원 과정에서는 교육 중심대학의 학사학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대학원 과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원 과정의 전공개설을 위해서는 동일 대학내의 동일계 학사과정 전공학과의 개설을 요구한 지금까지의 학사제도는 대학원 학생의 선발시 대학간 학생교류를 힘들게 만들었으며, 이는 이 나라에 전문 연구 영역의 학술교류에 바탕을 둔 학맥이 아니라 출신교에 따른 학맥을 이루는 대학내의 부조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석·박사과정의 졸업 소요학점을 자율화하여야 한다. 지금은 석사과정 수료를 위해 교과학점 24학점과 연구학점 3학점, 박사과정 수료를 위해 교과학점 36학점과 연구학점 6학점을 요구하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위해 최소한 2

년과 3년을 각각 수강해야 한다. 과연 이 제도가 얼마나 성실히 지켜져 왔을까? 석·박사과정의 학생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A라는 학과내에 세 분야의 대학원 전공분야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대학원 학생들이 학위과정 중 자기 전공분야에서 50%의 강좌를 수강한다고 하자. 석·박사 총합 60학점 중 50%인 30학점을 1~2학기로 분할하면 학기당 전공별로 15학점씩 강의를 하여야 하며, 교수 1인당 대학원 6학점 강의를 한다고 하여도 동일 전공계 교수가 2~3명이 필요하다. 한편,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의 과다한 강의 부담을 고려하면 대학원 6학점의 강의가 교수들에게 얼마나 힘든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평균적인 교수확보율 등을 참고할 때, 상기 졸업 요구조건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으며 대학의 교육행정을 부실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였음을 보여 준다. 능력있는 학생들에게 조기 학위취득의 길을 열어주고 대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학위수여 요구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진 대학을 보더라도 우수한 수준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구하는 명문대학에서는 교과학점에 대한 요구가 적으며, 연구논문의 수준이 떨어지는 대학일수록 교과학점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 상례이다.

5. 학기제의 자율화

학기제란 대학의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의 학기제는 대체로 학기당 16~18주를 수업 실시기간으로 하는 2학기제, 학기를 16주+8주+16주 혹은 16주+16주+16주로 실시하는 3학기제 또는 학기당 10~12주로 하는 4학기제 등이 있으며 이런 제도의 도입은 실시대학이 지향하는 목표와 그 대학의 특성에 크게 관계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각 대학은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연간 2학기 제도에 따라 제1학기는 3월초, 제2학기는 9월초를 시작점으로 하여 왔다. 또한 부분적이나마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 동안 6~8주의 계절 학기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교육법시행령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 제도는 학기의 시작시기 등이 다르기는 하지만 구미 등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쓰이는 학기제도이다. 2학기 제도는 대체로 많은 대학교재의 내용과 분량이 2학기제에 적당한 장점이 있지만, 연간 32~36주의 수업기간을 제외한 방학기간이 너무 길어 대학 운영상 낭비의 요소가 있었다. 실제로 일부 대학 및 대학 구성원들에게는 방학기간이 휴식기간으로 소모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16~18주의 수업 기간이 다른 학기제보다 길어 좀 더 포괄적인 강의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강의담당자의 정상적인 학습량의 요구가 있을 시 학생들에게는 힘들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수업기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 등에서는 대체로 학기 시작 12주 정도에서 4~5일 정도의 수업이 없는 휴식기간(봄 방학과 감사절 기간)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대학 학기운영을 보면 학기 중간의 각종 공휴일 휴강, 학기초의 수강신청기간 포함, 각종 축제 등 학교행사에 의한 수업 결손, 과다한 학기말 시험 기간의 책정 등으로 한 학기의 수업량이 부실하였던 게 사실이다. 왜 초·중·고등학교 어린 학생들의 방학기간이 대학의 방학보다 더 길지 않은가?

이의 대답이 다양하겠지만 이로부터 2학기 제도의 특성을 찾을 수 있다. 대학의 방학기간은 교수에게는 연구와 국내·외적인 학문교류의 기회를,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통한 사회 경험과 자율적인 계획에 의한 학습, 교수의 연구활동 참여 등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기간이다. 따라서 2학기제는 앞으로 대학원 중심 내지 연구 중심을 지향하는 대학들에게 적합할 것이며, 하계 강좌의 적절한 도입 등을 통하여 연구 발전되어야 할 제도로 판단된다.

특성있고 다양한 계절학기의 운영이 필요하다. 현행 대학의 2학기제에서도 계절학기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 겨울학기는 실제로 대학의 입시 행정이 실시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지만 여름학기는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대학은 국책대학 분야 등 자기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미리 설정하고 이 분야에 하계강좌를 집중적으로 개설하여 수강의 기회를 전국 대학생들에게 개방하고 학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물론 수강생을 제한하여야 하는 보완 조치 등이 따르지만, 원칙적으로 각 대학의 교육과 연구 분야의 특성화를 돕게 될 것이다. 대학들이 상호 학점 인정제를 도입하고 특성화 분야의 강의를 타대학 전공교수에게도 개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성화된 전공에 대하여 전국의 우수 학생과 교수들이 방학중 한 대학에서 하계강좌, 공동연구, 공동세미나 등을 실시함으로써 대학간의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범대학적으로 제공하여 과다한 일류대학 지원욕을 줄이고 재수생의 감소를 유도할 수도 있다.

교육과정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학기제를 도입할 수 있다. 현행 국내 대학의 2학기제를 살펴보면, 대학의 상당한 중요 교과목들이 한 권의 주교재를 바탕으로 교과내용이 2학기에 걸쳐 있다. 하지만 학기중의 방학기간은 두 달 이상이 넘는 관계로 학습의 중간과정에서 상당한 정체기간을 가지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 문제점은 3학기제나 4학기제에서는 해결될 수 있으며, 교육 중심대학에서는 특히 고려해 볼 문제이다. 대학의 단과 대학이나 대학원의 특수성에 따라 교육과 연구 목표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은 학생을 어떤 학기제에 따라 교육시켜야 하며 어느 정도의 학업 취득 수준이면 학사와 박사학위를 줄 것인지 졸업 소요학점 등을 대학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대학은 이미 거론되고 있는 일반 대학의 다양한 전공의 학사 출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학부나 의학부의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다거나 또는 우수한 중등교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계 교육대학원 과정 등에서 그들의 특수성에 따라 어떤 학기제를 채택하고 어떤 졸업학점제를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대학원 과정을 가진 미국 대학의 65% 정도가 2학기제를, 약 20%가 4학기제를 도입하고 있다.

6. 예상되는 문제점을 위한 준비

새로운 자율화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졸업소요학점을 낮추고 정원을 확대하여 저질의 학사학위를 대량 생산할 수도 있다. 연간 4학기제를 도입하고 낮은 졸업소요학점제에서 조기졸업의 학사학위 대량 생산화의 기업형 학원화 대학도 있을 수 있다. 이공계보다 투자비율이 낮은 인문·사회 계열에만 치중하려는

대학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대학의 정확한 평가제도의 도입과 사회적 질서의 선진화 속에서 스스로 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은 우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학과별 평가가 실시되고 대학종합평가인정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언론기관에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대학을 평가하고 있다. 대학의 입시성적에 의해서 서열화되던 대학사회에 교육의 질적 수준과 교수수, 연구환경, 연구업적 등 다양화된 평가를 바라보는 대학인들은 이제 대학발전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교육부로부터 독려를 받아 오던 각 대학의 전임교수 확보율 문제는 평가를 앞둔 대학 스스로의 자구책에 따라 전례없던 대량 교수 공채전으로 이어졌다. 몇 백 명의 교수를 일 년 내에 채용하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국제적인 연구업적을 가진 교수를 한 명이라도 더 학과에 유치하겠다는 작전이 학과평가를 앞두고 일어나고 있다. 이제 국가의 교육 정책기관은 지금까지의 대학행정 지도기능을 축소하고 학사 자율화를 따라 대학의 평가기능을 향상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 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대학에 대한 관심도 학생들의 대학 입시 경쟁의 결과를 여론화하고 매년 찾아오는 대학 입시철의 입시성적에 의거한 단일한 대학평가나 입시교육의 문제점 제시를 한 발짝 벗어나 대학의 다양한 기능을 평가하고 대학이 국가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대학들도 각자 특성화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다운 대학, 누가 먼저 만들어야 하나? 국립대학부터 모범적이어야 한다. 국립대학이란 국민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교육과 연구기능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인류발전을 위한 문화 창달을 위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대학이다. 더욱이 21세기의 국가 생존을 위해 정보산업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이 감당해야 할 기능을 생각할 때 국가가 경영하는 대학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그들의 국제적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의 모든 기업이 그것이 국영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그들의 경쟁력에 의해서 생사를 거듭해 왔으며,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산하의 각종 국책연구소도 그들의 기능 평가의 업적에 따라 통폐합되고 또 신설되어 왔다. 하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만은 예외지역에 속하는 무풍지대에 안주하였으며 또한 정부의 지원조차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해 그들의 옥답을 팔아 교육비에 투자할 때 정부는 수혜자 원칙주의를 앞장 세우고 있었다. 이제 국가경쟁력은 대학의 국제화 수준에 그 기저를 두어야 한다. 국내 대학의 국제화는 일차적으로 미국 내의 평균적인 주립대학 수준을 일차적으로 겨냥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 연구역량을 위한 대학의 교수수를 제외하고라도 교수 각자의 평균적인 연구역량도 크게 모자란다. 대학의 과학분야 연구업적의 생산품이라 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논문편수를 보여주는 미국과학정보연구소의 SCI(Science Citation Index) 자료에 의하면, 국내의 모든 대학과 연구소의 생산량인 논문편수를 총합하더라도 일본의 경도 대학,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이나 펜실바니아 대학 등 한 개 대학의 생산량에도 미흡하다. 아무도 이 정도 수준의 대학을 가진 국가가 선진국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는 우리

나라 국립대학이 선진국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 벌어질 정보과학기술분야의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국립대학을 선진국 수준의 대학다운 대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리하여 국민들에게도 선진국 수준의 교육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선진국 수준의 대학발전에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가 앞장 서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국립대학이 그들의 교육과 연구 역량이 어디에 있으며, 대학의 기능평가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국립대학으로서의 존립 의미가 없는 것이다. 대학의 자율화가 대학의 폐쇄주의적이고 무사안일주의적인 부작용을 낳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국제적인 선진화를 이루는 길에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대학이 어떻게 선진화 하는가를 국립대학이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7. 맺음말

이제 대학인은 세계 속에 자기의 몫을 다하는 각자의 대학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일어나야 하며 지금보다 좀 더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였다. 교육시장의 국가경쟁에 도전을 하여야 하며 세계적으로 개방된 과학기술의 경쟁시장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지적 소유권을 창출하여야 한다. 국내 대학의 교육과 연구기능을 특성화하고 수월성을 추구하여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차세기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의 선봉 지역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다양화되어 가는 다음 세기에 주인이 될 수 있는 인재도 길러내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대학은 그들이 맡은 역할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교육부를 위시한 국가교육정책 관련기관들도 금번 자율화 조치에 따라 다양화될 각 대학의 교육제도의 특성과 교육 연구 수준 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안의 개발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 국민들이, 특히 자라는 학생들이 양질의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다.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에 정부는 더 이상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금번의 학사행정 자율화는 모든 대학 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하며 앞으로 전개될 각 대학의 다양한 발전계획 추진이 이 나라가 차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곽진호/경북대학교 수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북대 수학과 교수, 미국 미시건 대학 교환교수를 지내고, 현재는 포항공대 수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교무처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Lectures or Linear Algebra』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Lens 공간의 평행선", "분기점을 가지는 곡면피복의 분포"외 다수를 발표했다.